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 : 경제

조 동 호

이화여자대학교

2010년 08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0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 : 경제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 서론

북한은 김정일 시대를 선군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선군이란 단어는 김정일 시대 모든 분야의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선군은 냉전의 해체와 고난의 행군으로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선택한 생존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아무리 어려워도 사회주의를 포기할 수 없고 개방과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연히 선군전략은 경제전략에서도 변화를 초래했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구절로 상징되는 선군시대의 경제전략은 기존 김일성 시대의 중공업 우선전략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 내의 모든 부문이 국방부문의 발전을 위해 종사·희생하는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북한이 내세우는 논리구조는 무엇인가. 과연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이후의 북한 경제전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남한 및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에 맞추어 북한의 선진화를 위해 공진화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본 장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본 장은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단기적 생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장기적 성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며 결국 북한체제를 붕괴로 이끌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향후에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선군시대 경제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전략으로는 점진적 쇠퇴가 불가피함을 보인 후 북한과 남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진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2.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내용과 평가

(1) 선군시대 경제전략 이전의 논의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의 대표적 경제연구지인 『경제연구』의 논문을 살펴보면 선군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0년 2호가 처음이며, 논문 제목으로 선군이 나온 것은 2001년 2호에 수록된 김동남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결정적담보”가 처음이다.¹ 또한 『연구연구』에 실린 논문들의 내용을 볼 때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은 2001년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인 1995~2000년의 경제전략 논의는 김일성 시대의 경제전략인 중공업 우선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혁명적 경제전략’, 국가의 통일적 지도, 자력갱생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1995년 이전 시기의 정책방향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 시기에 새로운 개혁적인 주장들도 등장한다. 특히 경제전략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반적으로는 중공업 우선정책을 옹호하고 있지만, 경공업과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농업 간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즉 김일성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김정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경제전략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기존의 정책인 중공업 혹은 선행부문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중공업과 선행부문의 발전이 있어야 경공업 및 농업 분야의 발전이 가능하며, 따라서 중공업 및 선행부문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정책방향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의 철저한 관철은 인민경제선행부문에 대한 계획에 예견된 기본건설투자의 원만한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조절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투자를 선행부문에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² 즉 “반드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³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논문이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경공업과 농업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그래야만 인민의 생활수준이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 역시 중공업 우선정책의 폐기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즉 기존 노선에 따라 중공업의 우선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경공업과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식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중공업 우선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을 건설”해야 하며, 현재 북한의 현실은 “경제장성속도를 조절하며 기본건설투자를 대담하게 줄여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과 자재, 설비들을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고 인민소비품생산과 수출품생



산을 늘이는데 돌릴 것을 기본요구로 하고 있다. 다시말하여 인민경제의 투자구조에서 소비재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을 생산수단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늘여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그래야만 인민경제 각 부문의 ‘조화로운 균형이 보장’되며 ‘생산의 급속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농촌에 대한 도시의 경제적지원을 백방으로 강화”⁵해야 한다는 주장도 중공업 우선정책의 관점에서는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의 청장년들이 “농촌에 영원히 뿌리내리도록 고착”시켜야 한다거나 “청장년들을 농촌에 계획적으로 넣어주어 농촌로력가운데서 청장년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⁶도 농업 우선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읽힌다. 아예 명시적으로 “무엇보다먼저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⁷

대외경제전략과 관련해서는 간헐적이지만 FDI, 무역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논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제경제협작은 세계의 여러 나라 (또는 지역) 국제경제기구, 기업체 또는 개인이 그 어떤 물질적 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해나가는 국제경제관계”⁸라고 규정한다. 또한 합작기업은 ‘기술교류에 유리한 일련의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고 ‘나라의 긴장한 외화문제를 풀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며 “합작기업을 통해 들여온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은 … 다른 기업소들에 보급될수 있다”면서 대외부문과 국내부문의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⁹ 즉 “대외무역관계의 70~80%를 차지하고있던 사회주의시장이 일시에 없어진 격변하는 경제는 대외경제교류의 형식과 방법, 대상을 새롭게 전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나아가 국제적인 경제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거래대상을 주동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시장은 많은 모순을 안고있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가지고있는 대상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매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외교관계가 없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경제관계를 가져야” 하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무역을 자본주의적방법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그에 맞게 무역방법을 고치는 않으면 안된다”라고 까지 강조한다.¹¹ 심지어 “자본가들이 우리 나라에 투자를 꺼려하는것은 제도상 문제나 정세보다 주로는 투자의 입맛을 돋굴수 있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지 못하는것과 관련”이 있다고까지 주장함으로써 해당 부문 관료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¹²

이는 자본주의 국가 기업의 투자는 “현지의 민족적인 외피를 씌워 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영상 마찰을 피하고 낮은 값으로 풍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리용하여 현지인민들을 기만하고 착취와 약탈을 진행”¹³하는 것이라는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이며, “외부적인 지원과 대외시장에 명줄을 걸고있는 경제와 인연이 없이 오직 자체의 힘으로 발전”¹⁴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에도 상충된다. “현 시기 대국적기업의 대외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와 약탈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본성이 더욱더 표면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⁵ 나아가 FDI는 투자대상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적지배를 실현’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하기도 한다.¹⁶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물적 지표가 아니라 생산성 지표의 중시, 생산단위의 자율권을 제고하는 관리방식의 개선 등 기존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사



람은 정치적생명과 함께 육체적생명을 가지고있는것만큼 정치도덕적요구와 물질적요구를 가지게” 되므로 상급, 장려급, 가급급과 같은 “추가적 로동보수제는 ...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을 반영하여 그들의 높이는 중요한 자극공간”이라면서 물질적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를 주장한다.¹⁷ 또한 “원가와 원단위소비기준을 따짐으로써만 경제적손실을 막고 경제토대의 잠재력을 충분히 동원리용할수 있다”거나¹⁸ “금액상 계획수행도 평가받게 하는것이 긍정적인의”를 가지며 ‘일한 것만큼, 번것만큼 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집단주의원칙과 모순되지 않으며 그것을 보다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고도 주장한다.¹⁹ 지방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경제의 종합적발전은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경공업제품생산을 늘임으로써 국가가 국방공업과 중공업발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할수 있게 한다”는 논리이다.²⁰

그러나 기존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기회주의적전해는 ... 당위원회와 집체적지도를 <<무의미>>하고 <<불필요>>한것으로 묘사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 <<지배인의 권익강화>>를 내걸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말살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의 관철을 가로막으려고 하고있”으며 ‘개별적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을 자유화’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궁색한 <<론거>>’이자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는데서 정치적 방법은 돈에 의한 방법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하다고 주장한다.²¹ 또한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일시적인 난관이 있다고 하여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포기하면 지방분권화, 자유화가 조장되어 나라의 경제를 파멸에로 몰아간다”고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조한다.²² 지방 생산단위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들고나오는 소유의 <<다양화>>와 <<지방분권화>>, <<기업자치제>>는 개별적지방 및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개별적지방 및 기업소들에 생산물의 생산과 처리에 대한 절대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지도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결과 “경제건설에서 혼란과 무정부성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의 창발성을 높일수 없게 하고 시장경제를 끌어들이는 길”이 된다고 비판한다.²³

(2)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내용

선군시대를 북한은 김정일의 정의에 따라 “우리 시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선군시대”라고 규정한다.²⁴ 여기에서 군사를 선행한다는 것은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는것을 의미”한다.²⁵ 북한은 이처럼 군사를 제일로 하는 정책을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로선’이라면서 “선군시대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의미는 그 누구도, 력사의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본적이 없고 또 제기한적도 없다”고 선전한다.²⁶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력사가 백수십년이나 흘렀고 지구상에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한지도 8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선군이라는 말자체가 없었다”면서 김정일의 독창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와 정책에서는 당연히 선군을 할 필요가 없고 군사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최초’라는 점에 대해서만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마르크스도 국방공업의 중요성에 대



해서는 생각도 못했고, 레닌과 스탈린도 중공업만 강조했을 뿐 ‘경제건설전략에 대한 옳은 견해를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²⁷

선군시대의 대두에 따라 경제전략도 국방공업 우선으로 변화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즉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등장한 것이다. 『경제연구』에서 국방공업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1999년 2호의 김재서(1999)에서 처음 등장하며, 선군과 국방공업을 연결시키는 논의는 2001년 1호의 리성혁(2001)에서 등장한다. 논문의 제목에 선군이 나타나는 논문은 김동남(2001)이 최초이나, 여기에서는 국방공업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볼 때 『경제연구』의 논문들은 2002년까지는 아직 선군논리와 국방공업을 분석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리기성(2003)과 박명혁(2003)에 이르러서야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진다.²⁸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표현상으로는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국방공업을 위해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다른 부문들의 발전을 희생하겠다는 의미이다.²⁹ 국방공업은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며, 국방공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의 근본적인 경제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투자에서 국방공업의 몫을 먼저 조성하고 로력, 설비, 자재, 전력 등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 보장”해야 하며,³⁰ “생산수단생산을 소비재생산보다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³¹ 또한 마찬가지로 “계획지표선정에서 군수생산지표와 민수생산지표를 구분하고 군수생산지표를 중시”해야 하며, “국가예산지출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지출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해야 한다.³²

실제로 북한 문헌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것은 경공업과 농업발전에 힘을 넣어 국방공업에 적극 따라세운다는것”이며, “국방공업을 그 어느 부문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대한다는것”이라고 설명한다.³³ 또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은 경공업과 농업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그를 경제건설의 중요과업으로 틀어쥐고 앞서나가는 국방공업에 적극 따라세울것을 요구한다”고 우선순위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³⁴

한편 북한은 국방공업을 군수공업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국방공업은 군대에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보내주기 위한 공업”³⁵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생산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부문,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 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군수생산부문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부문으로서 여기에는 주로 국방공업이 속한다”라고 규정한다.³⁶ 따라서 “군수공업은 군사적목적에만 쓰이는 물자를 생산하는 부문”이며 “각종 탄알과 무기, 군사장비들을 생산하는 부문”인데 “우리의 군수공업은 제국주의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는 사업에 이바지”하므로 “우리의 군수공업을 국방공업이라고 말하게 된다”고 정의한다.³⁷

그러면 국방공업을 우선한다는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어떤 논리구조를 바탕으로 정당화되고 있는가.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의 자본증식을 위한 잉여가치생산’이 경제활동의 목적이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이 경



제활동의 근본 목적”이 된다고 주장한다.³⁸ 여기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란 인민대중이 첫째,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둘째, “유족하고 문명적인 생활을 누리 는것”으로 정의되며, 자주적인 지위는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옹호보위함으 로써 담보”되고 유족하고 문명적인 생활은 “생활적수요를 물질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보장”된 다고 논리를 전개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은 두 가지 중에서 첫째, 즉 “조국보위를 위한 물질적수요를 우선적으로 원만히 충족시킬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사회 주의제도를 고수한 조건에서만 인민생활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³⁹ 즉 아 무리 물질적 부가 풍부하여도 “인민대중이 사회와 경제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인민들이 그 혜택을 입을수 없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도 누릴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공 업의 우선적발전이 사활적인 문제”이며, “국방공업을 떠나서는 나라와 인민의 안녕도 생각할수 없고 경제강국도 건설할수 없다”고 주장한다.⁴⁰ 예컨대 “사탕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는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며,⁴¹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살기보다는 비록 잘 먹고 잘 입지고 잘 살지는 못해도 자주적으로 살자는것이 인간의 본성적요구”라는 것이다.⁴²

물론 국방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뒤로 밀리게 되고 그 결과 인민생활의 향상 측면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북한은 “선군정치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만 치중하고 인민생활을 홀시하거나 희생시키는 정치가 결코 아니다. 선군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여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할뿐만아니라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것이다”라고 응답하고 있지만,⁴³ 어떻게 ‘유 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리는 결여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수단은 “근로자들이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 여 사회와 자기 자신을 위한 집단적인 자각적로동을 적극 벌려 나감으로써 사회적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게 하는 사상정신적 바탕은 혁명적군인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⁴⁴ 그러면 왜 혁명적 군인정신인가. 이에 대해서는 “매 시대에는 그에 알맞는 시대정신이 있으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한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은 ‘새로운 시대 선군시대’에 진입했으며 “선군시대는 혁명적군인정신에 의하 여 전진하고 승리하는 력사의 새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⁴⁵

즉 경제발전의 추동력을 근로인민대중이 아니라 물질경제적 요인에서 찾은 경우는 결국 개 인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가 복귀하는 비극적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따 라서 “지난 시기에는 혁명의 주력군을 로동계급으로 보았으며 로동계급의 정신, 혁명적열의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추동력으로 고찰”하였으나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경제 적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것은 혁명군대” 이며 혁명군대가 창조한 혁명적 군인정신은 가장 위대한 추동력이라는 것이다.⁴⁶



(3) 김일성 시대 경제전략과의 연계성

김일성 시대의 경제전략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명제로 요약된다. 따라서 김일성 시대의 경제전략과 선군시대 경제전략과의 차이점은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부문이 중공업이나 혹은 국방공업이나에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문헌은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김일성 시대의 경제전략과 “별개의 로선이 아니며 그것을 배제한것이 아니”라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로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⁷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⁴⁸ 첫째, 국방공업과 중공업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부문이다. 즉 중공업과 국방공업은 밀접히 연관된 부문으로서 중공업은 국방공업의 기초이고 국방공업은 중공업의 빠른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물질적·기술적 특성에서도 국방공업과 중공업은 공통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국방공업에서 핵심인 병기공업은 기계공업이며,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한 부분이지만 병기를 생산하면 국방공업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 즉 중공업 부문에서 국방공업에서 요구하는 연료, 동력, 설비, 자재 등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어야 국방공업의 빠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에는 나라의 경제토대라고 하면 곧 중공업이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오늘에는 국방공업을 주도적지위에 놓고 중공업을 함께 보는 것이 과학적”이라면서 “중공업은 곧 국방공업이며 국방공업이자 중공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⁴⁹

이러한 논리만으로는 불충하다고 판단했는지 북한의 문헌들은 김일성 역시 국방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실제로 국방공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음을 선전하는 논문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김일성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토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국방공업”이며, 김일성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 기간 국방공업을 중시”했다는 것이다.⁵⁰ 또한 김일성도 자립적 민족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공업이라고 했다면서 1945년부터 이루어진 국방부문 공장 건설 사례를 열거하는 논문들도 존재한다.⁵¹ 그러나 국방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중공업을 중시하는 기존의 김일성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며, 따라서 두 전략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은 김일성 시대와 그의 유산을 부정할 수 없는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4)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평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다. 선군전략이 나오게 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엄중한 도전에 직면”⁵²했기 때문이라고 북한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대내외 위기감의 고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이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었을 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미국의 세계 최강의 유일 강국으로 등장하였으며 전통적 혈맹이었던 중국도



남한으로의 접근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강자가 약자를 먹어 치워도 어데 가서 하소연할곳도 없는 때”가 되었다고 인식했을 것이다.⁵³ 예컨대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라크는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 자주권을 빼앗기고 경제는 예측경제로, 풍부한 자원은 제국주의자들의 먹이감이 되고 말았다”는 인식인 것이다.⁵⁴ 그 결과 국가를 유지하고 체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그러한 판단이 선군과 함께 국방공업 우선의 경제전략을 채택하게 하였을 것이다.⁵⁵

물론 선군이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으며, ‘선민’을 기치로 하는 개방과 개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선군시대의 경제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단기적으로 볼 때도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슬로건만 있을 뿐 ‘어떻게’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든 경제성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은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가 있거나 생산효율의 제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체제의 특성상 노동의 추가적인 동원은 불가능하며,⁵⁶ 현재 여건상 생산효율 제고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경제전략은 대내외, 특히 외부자본 확보 전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성장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자본동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방공업은 외부자본 유치가 불가능한 분야이며, 그나마 한정된, 그리고 부족한 내부자본을 국방공업으로 우선 배분하는 경우 다른 부분의 생산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본동원 대신에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과학기술의 강조, 무역의 강조, 생산효율의 제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 현재 북한의 경제현실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기가 곤란하다. 우선 북한이 강조하는 과학기술은 현실에서는 ‘기술개진’, ‘개진현대화’라는 단어로 대표된다. 즉 설비의 현대화 의미이며, “설비를 제때에 보수하고 갱신”하자는 것이다.⁵⁷ 그러나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국방공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비의 현대화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역 역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적은 노력과 비용, 내부예비, 절약, 질적 지표의 강조, ‘실리를 보장하는 자력갱생’ 등 생산효율의 제고도 독려하고 있으나, 자본의 추가적인 투입 없는 상태에서 생산효율이 증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결국 북한은 2002년 7·1 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의 설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권영경(2008), 한기범(2009) 등은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시점에 주목하여 선군시대 경제전략과 7·1 조치가 거의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국방공업 우선’과 민수부문의 ‘경제관리 개선’을 동시에 묶어서 구상”했다고 볼 수 있으며, “개혁적인 정책과 보수적인 정책이 혼재된 구상이었다”는 것이다.⁵⁸ 그러나 하나의 인물이 거의 상반되는 구상을 동시에 추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이미 7·1 조치 이전에 실행 중이었으나 대외 공식화가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김정일은 1997년 1월 1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경제사업도 군대를 강화하는 사업과 연관시켜” 하라고 지시했으며, 1999년 1월 1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도 “국방공업을 떠나서는 경제강국도 건설할 수 없으며 …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라는 점을 강조했다.⁵⁹ 또한 1999년 6월 16일 「노동신문」과 「근로자」에 실린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는 제목의 공동논설에서도 국방공업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⁶⁰ 뿐만 아니라 2001년 10월 3일 중앙당과 내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담화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도 김정일은 “군수공업을 선차로 내세우고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 그리고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생산에 힘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상으로 볼 때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을 전후한 시기부터 추진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선군시대를 선포했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전략을 추진해 오던 상황에서, 선군이라는 슬로건을 철회하지 않는 한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수정할 수 없었으므로 경제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즉 형식상으로는 계획경제의 보완을 위해 시장 기능을 도입한 것이며, 내용상으로는 경제관리체제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경제연구』에 수록된 논문들을 보면 대략 2001년을 전후하여 7·1 조치적 성격의 내용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한다. 실리, 경제적 효과성, 생산의 정상화, 분권화, 기업의 ‘경영상 독자성’, 노동보수에서 평균주의의 철폐, 물질적 자극의 중요성, 합리적·객관적인 경제관리체제의 도입, 대외경제관계 확대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논문들이다.

물론 이와 배치되는 논문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물질적자극공간, 경제적공간들의 리용을 기본방도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는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좀먹고 자기 단위의 당면이익만을 추구하는 기관본위주의와 온갖 무질서한 요소들”을 척결함으로써 중앙의 집권적이고 통일적인 계획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¹ “남의 나라의 경제력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의 상품을 사들이는 방법으로는 나라와 인민의 수효를 언제까지도 제대로 충족시킬수 없”으므로 “원료, 연료, 자재도 우리의것이고 부문구조도 우리 식이며 기술도 우리의 기술”이어야 한다면서 오리혀 복고적인 철저한 자립경제, 자력갱생을 주장하기도 한다.⁶²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물질적자극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경제관리체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반동들과 그 대변자들은 자본주의관리방법이 그 어떤 <<효율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에 비하여 자본주의기업관리방법이 더 높은 경제적효과를 이룩할수 있는듯이 진실은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⁶³

그러나 결국 7·1 조치가 실시되고, 종합시장이 허용되었다. 국방공업을 강조하는 전략만으로는 경제강국의 건설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불법적인 시장의 확대에 의해 계획경제의 근간이 붕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즉 7·1 조치와 종합시장의 설치선군시대 경제전략을 보완하고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었다. “개혁적인 정책과 보수적인 정책이 혼재된 구상”이 아니라 “보수적인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적 정책의 도입”이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7·1 조치라는 개혁적 정책이나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의 설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7·1 조치의 시작은 고난의 행군이 끝나자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해야겠다는 ‘일시적 충동’이자 새로운 세기의 도래에 따른 ‘들뜬 의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자신이 개혁적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7·1 조치를 폐기하지 않았을 것이다.⁶⁴ 시장에 대한 김정일의 시각은 더욱 소극적이었다. 평소 김정일의 농민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시장장려 조치에 대한 간절한 언급, 시장장려 방침의 인용빈도 등 선전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김정일의 ‘소극적인 수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만약 김정일이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면 종합시장의 건립이 늦어지지 않고 2003년 중에 일제히 훌륭한 건물로 건립되었을 것이다.⁶⁵ 실제로 김정일은 2005년 2월 2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문건에서 “일부 일군들은 경제지도와 관련된 당의 의도를 잘알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일군들은 시장을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데서 보조적인 공간으로 리용하자는것을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장과 시장경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 우리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그 무엇을 <<개혁>>한다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배급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고 계획경제라고 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의 측면이 크다. 더욱이 시장이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상징이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도 시장의 경험은 주민들로 하여금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서 체제 유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극히 위험한 것이었다. 북한도 이러한 위험성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북한은 시장의 설치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첫째,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둘째, 시장을 허용한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의 지시·승인·감독 하에 있는 시장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시장이 확대되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철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설치에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2006년의 -1.1%, 2007년의 -2.3%를 제외하고는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6-07년의 경우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업 생산의 부진을 마이너스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 두 해의 경우도 플러스 성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⁶ 왜냐하면 시장의 설치에 부가가치의 창출을 수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국가가 밀가루 100원 어치를 생산해서 배급하면 그것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밀가루를 그냥 소비하지 않고 빵이나 국수를 만들어 120원에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고, 그만큼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은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만을 낳지는 않았다. 어차피 출근해 봐야 전력 및 자재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주민들이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출근율이 10%로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낮아지고, 매일 있던 학습, 토론, 총화도 한 달에 한 번으로 몰아서 하는 실정이며, 노동자의 90%가 시장에서 노동과 생계활동을 하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다.⁶⁷ 심지어 상인계층이 출현하고 ‘산업자본의 맹아’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⁶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불법적 사적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⁶⁹ 합법적이긴 하지만 사적인 경제활동으로는 텃밭, 부업밭, 폐기밭 등의 농업생산과 기업소의 계획외 생산 등이 있다. 현재 북한 농업 생산물의 약 20-30%는 텃밭, 부업밭, 폐기밭 등 사적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영기업소의 계획외 생산은 소비재 생산의 20-30%, 생산재의 경우도 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하공장, 사금융, 밀무역, 기타 외화 암거래·주택거래·개인사업 등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도 증가하고 있으며, 위장판매, 가격 부풀리기, 자재 뒷거래, 물품 유출 등 계획경제 내에서의 불법적 경제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연구』에서도 대략 2005년 이후로는 7·1 조치의 부정적 결과를 비난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이전에는 생산 하부단위의 창발성이나 ‘경영상 독자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2005년 이후에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증한다. “사회주의국영관리에서는 소유권을 가지고있는 국가가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야 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는 ... 기업소의 창발성을 약화시키는것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것이다.⁷⁰ 또한 “만일 사회제도의 구성부들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비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변질되면 사회제도전반이 변질”되므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허물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¹

따라서 북한은 2005년 하반기 무렵부터 시장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05년에는 배급제를 부활함으로써 시장의 영역을 축소시키고자 했으며, 2006년에는 만 17세 이상 성인 남성의 장사 금지 및 개인고용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2007년에는 장사를 허용하는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비공식 무역회사 정리, 시장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통제, 사적 경작지인 폐기밭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사적 경작지 단속, 시장 이외 지역에서의 장사 금지 및 직장 복귀 조치 등을 시도하였다. 마침내 2008년에는 2009년부터 시장을 폐쇄하고 기존의 10일장으로 회귀한다는 지시가 통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는 북한당국의 의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시장의 효율성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 북한주민이 강력히 반발하였기 때문이다. 설령 주민의 반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배급을 재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폐쇄한다면 경제적 혼란과 곤경만 가중될 것이므로 북한당국으로서도 무작정 폐쇄를 강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보다는 정치적 생존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대내경제에만 적용될 뿐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대외부문에 대한 전략은 아니라는 근본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출범 이후 북한경제



는 합법과 불법·불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모하였다. 이런 상황이 북한주민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북한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시스템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북한경제는 ‘성장하며 붕괴’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북한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점진적 쇠퇴와 탈출의 모색

2009년 말 북한은 화폐개혁을 실시함으로써 계획경제체제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을 앞세움으로써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선군시대 경제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경제연구』에서는 이미 선군시대 경제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었다. 우선 국방공업과 중공업의 관계에 대한 미묘한 강조점의 차이가 발견된다. 일반적으로는 선군시대 경제전략에 따라 “중공업을 국방공업을 위한 중공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거나⁷² “어느 부문에서나 군수생산에 필요한 것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대주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국가적으로 그 실현을 위한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⁷³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자립경제는 국방공업과 중공업을 위주로 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방공업과 민수공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라든가⁷⁴ “선군시대에는 중공업부문에 더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이 부과된다”는 견해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공업에 대한 비중이 높다.⁷⁵

국방공업과 경공업·농업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중추적역할을 한다”는 것이 선군시대 경제전략의 충실한 해석이다.⁷⁶ 그러나 “마땅히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으로 큰힘을 넣어 나라의 국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도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며, 중공업은 국방공업, 경공업, 농업발전에 다같이 복무하여야 한다”거나⁷⁷ 선군시대 경제전략이란 “국방공업과 경공업, 농업사이의 균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민경제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⁷⁸에서는 국방공업에 대한 강조를 낮추고 있다. 나아가 “국방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들의 개진현대화도 힘있게 다그쳐야 군사경제력을 빨리 강화할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⁷⁹

이러한 갈등은 7·1 조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바로 화폐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경공업·농업 우선주의를 내세우게 한 이유가 되었다. 즉 화폐개혁은 7·1 조치로 인해 지나치게 커진 시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여 계획경제를 복원하려는 시도이고 국방공업 대신 경공업·농업에 대한 강조는 실제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이로써 김정일 선군시대의 경제운영 기조는 제3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1기에서는 계획경제 시스템과 국방공업 우선의 전략을 추진하였고, 2002년 이후 제2기에서는 경제전략은 그대로 둔 채 7·1 조치를 통해 시장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제3기에서는 시장을 철폐하고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경공업과 농업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표-1] 선군시대의 경제운영 기조

시기	운영시스템	경제전략
제1기(1995~2001년)	계획	국방공업 우선
제2기(2002~2009년)	계획 + 시장	국방공업 우선
제3기(2010년~)	계획	경공업 · 농업 우선

제3기가 대두된 배경에는 강성대국 건설 시한으로 설정한 2012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과 후계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강성대국 건설은 경제강국의 건설로 완성되는데 북한 스스로 설정한 시점이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북한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핵 보유 선언으로 군사적 안보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다는 내부적인 평가도 국방공업 우선에서 경공업 · 농업 우선으로 변화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이다. 한편 시장의 철폐는 후계체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한 발전이 세습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지나친 확장은 명분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기의 경제운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수십년 간의 북한 스스로의 실험이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볼 때 경제의 개방을 포함한 시스템의 개혁만이 자생력 있는 경제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김정일의 시대에서는 시스템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당분간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확보와 부분적인 외자 도입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들어 발표된 나선시의 특별시 격상이나 조선 대풍국제투자그룹의 설치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바라는 만큼의 외자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경제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더욱이 설령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현재와 같은 선군시대 경제전략을 추진하는 한 외자 도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도 어렵다.

결국 선군을 고집하는 한 북한경제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선군을 고집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경제가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와 같은 경제적 곤경 혹은 위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 이하이고



1990-200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5% 이하인 26개 국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비록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독재정권에 의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⁰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남한의 존재로 인해 이와 같은 경제적 곤경 혹은 위기 상태가 점차 심화된다면 정치적 안정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쇠퇴와 그로 인한 체제의 붕괴를 막고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군의 포기과 시스템의 개혁과 경제의 개방만이 유일한 길이다. 물론 선군의 포기는 김정일 시대에는 쉽지 않을 것이며,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4. 북한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진화 전략

(1) 이행과 개혁 단계

가. 북한

북한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의 후계자⁸¹는 핵과 선군의 포기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대신 대가로 얻게 되는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과 투자는 북한경제의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자본이 유입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북한경제의 자생력 있는 성장기반이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유입되는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계자는 경제적 생존의 새로운 수단으로 경제체제의 이행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향한 체제 이행과 개혁에 착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념적으로는 선군 대신에 선민 혹은 선경을 채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꾸어 말하면 기존의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으로 본다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점진적 전략(gradual approach)과 급진적 전략(big-bang) 혹은 충격 요법(shock therapy)으로 대별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점진적 전략이 우월할 것으로 여겨진다. 체제전환은 당연히 경제주체들에게 커다란 충격인데다가 과도기적으로는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경제난이 심화되어 있는데다가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접해보지 않았으며 남한이라는 경제적 대안이 존재하는 북한으로서는 급진적 전략은 너무 위험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후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자칫하면 권력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급진적 경제체제 이행과 개혁은 우선순위가 낮은 대안일 수밖에 없다.

핵과 선군을 포기한 북한이 경제체제의 이행과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즉 사회주의의 근간인 국가 중심의 소유제에서 사적 소유제로 변화하는 것이며, 계획경제의 핵심인 계



획 중심의 경제운영을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의 전환은 사회주의 내에서의 경제개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⁸² 사회주의 내에서의 경제개혁은 국유와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틀 안에서 일부 사회주의 기능의 수정과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유를 유지하면서 물질 인센티브와 같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주의 내의 경제개혁에 불과한 것으로서 체제전환은 아니다. 사회주의 내의 경제개혁의 사례는 많다. 예를 들면 1965년 소련의 코시킨 경제개혁은 개혁의 주된 초점이 인센티브의 도입에 있었다.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라 불리는 헝가리의 신경제메커니즘,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제도 등은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제적 중앙계획을 상당 부분 포기했다. 즉 신경제메커니즘과 자주관리제도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두 가지 기동인 계획과 국유 중 계획은 상당부분 포기했지만 소유권의 변화, 경쟁제도의 도입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사회주의도 사회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체제로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개혁 노력은 기본적으로 기존 체제 내에서의 개선(improvement within the system)이지 체제 자체의 개혁(reform of the system)은 아니며, 그 결과 체제유지적 경제개혁(system-preserving reform)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유권의 사유화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화는 북한의 이행과 개혁에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는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체제전환을 시작하면서 도입한 이행과 개혁정책들을 북한 역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유화, 가격자유화, 금융개혁, 재정개혁, 무역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를 들 수 있다.⁸³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체제전환 관련 과제들 이외에도 북한 특유의 ‘주체형’ 경제제도 개혁, 국제금융기구 가입, 산업구조 조정 등의 추가적인 과제 역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이러한 체제전환의 모든 과제들을 이행과 개혁 단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 과제 중에서 이 단계에서 추진할 과제와 다음 단계에서 추진할 과제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사유화의 경우 모든 국유 및 협동단체 소유를 일시에 민간 소유로 이전하는 것은 커다란 부작용이 우려된다. 북한 주민은 국유자산을 매입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설령 대부분의 공장과 기업이 부실화되어 실제 가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수의 공장과 기업을 매수할 외국기업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매입 의사와 능력을 지닌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십년간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로서는 국부 유출과 함께 외국자본의 지배, 그리고 그에 따른 자존심의 훼손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이행과 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에게 무상분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행과 개혁에 소요되는 자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상황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소규모 사유화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 매점, 유통·교육 등의 분야의 소규모 서비스업 등에서의 사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소규모 사유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진입과 퇴출의 자유



화와 함께 경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격 자유화는 경제체제 전환의 핵심적 부분의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가격에 대한 국가 통제를 일시에 철폐하는 전면 자유화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지나치게 클 것이다. 북한의 경제주체들도 가격 자유화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면 자유화를 실시하는 경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이행과 개혁에 대한 반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격 자유화는 점진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단계에서는 생필품, 전략물자 등 경제활동에 중요할 역할을 수행하는 품목을 제외한 품목들부터 자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가격의 이중구조로 인해 초래되는 지대추구행위 (rent-seeking) 기회를 북한당국이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격 자유화를 하는 품목들의 경우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인 자유화 스케줄을 작성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자유화의 폭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개혁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금융제도의 개혁은 실물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창출·순환시켜 주고 또한 북한경제 내에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을 과잉유동성의 흡수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초기 체제 이행과 개혁에 필요한 자본 동원 및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금융개혁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이다. 즉 제도적으로 중앙은행의 업무와 상업은행의 업무를 구분하여 현재 조선중앙은행의 단일 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1990년대에 체제전환을 시작하면서 가정 먼저 추진한 과제가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이었다. 따라서 비록 다른 금융개혁 과제들은 서서히 진행시킨다고 할지라도 이원적 은행제도의 구축만은 현 단계의 초기에 완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북한 금융제도를 고려해 볼 때 조선중앙은행의 기능 중에서 상업적인 기능은 상업은행을 설립해 분리하도록 하고 무역 및 외환관련 기능은 무역은행에게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화폐기능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즉 화폐가 단순히 국가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교환수단, 지불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 저장이라는 화폐 고유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거래에 있어서 현금 거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무현금융통' 원칙을 폐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제로부터의 유산인 부실채권문제가 신속히 청산되어야 한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기존 금융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는 경우 은행부문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 및 개혁 단계에서 부실여신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조기에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후 본격적인 변환단계에서 북한의 은행들이 남한 및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1970년대 차관 도입으로 발생한 서방권 은행에 대한 미결제 채무는 국가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선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율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북한의 환율은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로 이분화되어 있고, 양자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은 공식환율로 단일화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환율 수준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모두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행과 개혁 단계에서 거시경제 안정이 중요한 과제를 감안하면 우선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정개혁의 핵심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을 철폐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행과 개혁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효율성의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연성예산제약을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으로 바꾸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 된다. 다만 일시에 모든 공장과 기업에 경성예산제약을 요구하는 것은 광범위한 도산의 우려가 크므로 작은 규모,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부문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과 당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을 내각으로 통일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예산은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군과 당의 예산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는 이행과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들 예산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이행과 개혁 과정에서 군과 당이 자신들의 이해가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바탕으로 심각한 개혁 도전세력으로 부상할 우려도 있다.

무역과 관련된 개혁들은 초기에 저개발경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무역 권한을 상당 부분 개별 기업으로 이양함으로써 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입 승인, 쿼터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해야 한다.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는 경우 비록 국내외 가격 차이가 발생할지라도 가격구조 자체가 왜곡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가격과 외국가격 간의 연계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초기에는 생산재보다 소비재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차별 관세를 인정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무역제한장벽을 낮추고 동시에 무역장벽의 분야별 차이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유치산업 및 비효율적이지만 전략 분야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부 예외적으로 수입제한 및 수출진흥책을 인정해 주되 일시적인 조치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과 개혁의 본질적인 과제는 아니지만, 거시경제 안정화는 이행과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과제이다.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초기에 경제안정을 달성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은 경제재건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었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인플레이션 억제에 실패한 국가들은 경제재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제전환기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국영기업의 연성예산제약과 임금결정시 기업의 이익대변장치 부재, 그리고 국영기업으로부터의 징세 급감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역시 이행과 개혁에 대한 지지 기반의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체제 이행과 개혁으로 인한 과도기적 부작용과 충격은 불가피하며,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이 점차 축소되어 온 상황에서 북한주민 개개인이 스스로 이행과 개혁의 충격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시절 상황이 훨씬 열악해진 사회보장을 개진·확충하는 일은 이행과 개혁의 지지 확보는 물론 경제발전의 위한 토대 구축에도 필수적이



다.

북한 특유의 경제제도를 개혁하는 작업도 이 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지배인 중심의 공업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농업관리에 있어서는 협동농장 체제는 유지하되, 이행 및 개혁 단계에서는 가족 단위의 도급제 제도를 실시하여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이념 차원에서는 기존의 ‘주체’, ‘자립’, ‘자력갱생’, ‘유무상통’ 등 대외개방적 경제정책의 도입을 가로막았던 이데올로기들을 철폐하고 비교우위, 생산성, 기술진보 등의 개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치·도덕적 자극보다 물질적 자극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

산업구조의 조정도 필요하다. 물론 일시적이고 전면적인 구조조정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작은 부분부터 점진적인 스케줄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과 개혁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 부문의 축소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중공업 우선정책을 실시해 왔으므로 중공업 부문이 다른 부분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설비의 낙후, 낮은 생산성 등으로 비효율이 심각해진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을 민수로 전환하고 이행과 개혁의 초기에 심각해질 수 있는 생필품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공업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서비스업의 확대도 추진되어야 한다.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탓에 북한에는 민간 서비스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행과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 지역 간 이동도 활발해지고 대외개방의 진전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도 증가할 것이므로 식당, 숙박업소, 관광, 편의점 등 민간 서비스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이들 민간 서비스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이행과 개혁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을 축소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 및 기술훈련생의 해외파견을 포함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어 책임 있는 성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메시지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북한의 체제 이행과 개혁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나. 남한 및 국제사회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경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개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록 북한이 이행과 개혁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독자적인 자본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 및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나누어 볼 때 북한의 이행과 개혁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및 자본 및 기술 지원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남한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성공적인 이행과 개혁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필수적인 선결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실 북한이 폐쇄적이고 불안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은 실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 및 국제사



회는 북한의 이행과 개혁을 선택하는 경우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이행과 개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북한이 선군을 포기하고 체제의 이행과 개혁을 실시하더라도 체제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일이다. 김정일의 후계자는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기반이 약할 것이며, 그만큼 이행과 개혁이 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이라는 의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 및 국제사회는 정치·외교적으로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약속과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순조로운 이행과 개혁을 위해 물질·인적 지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체제 이행과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생필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식량, 의복,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경제 안정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경제가 스스로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자생력 있는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한 내의 주요 공장 및 기업, 단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과 투자가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은행, NGO 등 다양한 차원에서도 전개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한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이 북한의 관련 기관들과 자매결연 방식을 통해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한 및 국제사회는 ‘북한개혁지원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협의체는 기존의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관련 5개국 이외에도 참여 의사를 지닌 국가와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북한개발지원종합계획(가칭)’을 수립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 정책자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조정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 남한은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국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 생산품의 소비처로서의 역할은 북한이 이행과 개혁 단계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화 획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나아가 향후 전개될 남북 경제통합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한의 KOTRA를 활용하여 북한의 해외수출시장 개척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투자의 경우에는 민간의 자유로운 대북 진출을 허용하되, 투기와 북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며, 정부 차원의 투자는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북한이 추진하는 각종 이행과 개혁 과제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물질·인적 지원도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희망한다면 남한 및 국제기구들이 북한 현지에 관련



지원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은 ‘경제개혁지원협의 사무소(가칭)’를 설치하여 사유화, 가격 및 무역 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등 이행과 개혁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일본은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평양사무소, ADB(아시아 개발은행)은 ADB 평양지사 등의 설립을 통해 관련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관련 공무원, 전문가, 교수 등을 초청하여 단·장기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북한 내에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남한 및 국제사회가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다.

(2) 변환 단계

가. 북한

이행과 개혁 단계에서의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북한은 변환의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행과 개혁 단계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시기였다면, 전환 단계는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는 시기이다. 제도에 의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며, 선경, 선민이 정착되는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추진된 과제들을 완결해 나가는 한편 ‘선진경제’ 북한을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사유화의 경우 대규모 사유화를 추진한다. 이행과 개혁 단계에서 소규모 사유화를 통해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대규모 기업과 공장, 은행 등의 사유화를 통해 소유권의 완전한 민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변환 단계에서는 협동농장을 해체함으로써 개인농의 출현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가격 자유화는 이전 단계에서 추진된 자유화 스케줄을 완성한다. 즉 변환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자유화가 유보된 생필품 등에 대한 자유화도 실시함으로써 시장이 완전히 계획을 대체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의 계획을 법적으로 철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다만 완전한 가격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방을 추진한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을 개설하고 자본 자유화를 실시하여 외국 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인정한다. 또한 남한을 포함한 외국 은행의 진입을 허용하여 자본의 도입 및 선진 금융기법의 습득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보험 회사의 설립도 이 단계에서는 자유화되어야 할 것이다. 환율은 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며 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무역에 있어서도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한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북한경제에 가장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남한과는 일종의 ‘경제공동체협정’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의 관계보다 훨씬 밀접한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구조의 조정의 경우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이전 단계에서 추진된 중공업 구조조정에 이어 변환 단계에서는 농업부문 및 정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출



제조업과 민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정착되도록 한다.

나. 남한 및 국제사회

북한이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변환하는 단계에서 남한 및 국제사회가 하여야 할 일은 이와 같은 새로운 체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북한이 추진과는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이행과 개혁 단계에서 실시하던 물적·인적 지원을 북한의 변화 단계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지원의 중단·축소로 나타날 것이고,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생필품 지원은 이 단계에서는 중단이 될 것이며, 사유화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이 대규모 사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한 및 국제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개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 결과 변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혁 초기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개혁에 지지를 하다가도 개혁의 진행에 따라 부작용과 혼란이 실업, 사회보장의 축소, 실질임금의 저하 등의 형태로 개인의 경제생활 및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남한 및 국제사회는 변환 단계에서 완성될 사유화, 가격 및 무역 자유화, 산업구조 조정 등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찰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남한은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변환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이를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대규모 사유화에 적극 참여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정착과 산업구조 조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남북 경제통합의 기틀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남북한 경제의 물리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의 변환과 남북한 경제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경쟁력 있는 ‘한반도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주(註)

- ¹ 김동남. 2001.
- ² 박두성. 1996. 3-4.
- ³ 김동식. 1999. 3.
- ⁴ 리준혁. 1996.14-15.
- ⁵ 박재영. 1997. 13.
- ⁶ 박명달. 1997. 25.
- ⁷ 장명호. 1999. 16.
- ⁸ 리명숙. 1996. 41.
- ⁹ 리성희. 1997. 41.
- ¹⁰ 최영철. 1998. 28.
- ¹¹ 최영옥. 1997. 13-14.
- ¹² 이정용. 1998. 17.
- ¹³ 박현철. 1997. 48.
- ¹⁴ 리민철. 1997. 7.
- ¹⁵ 황철진. 1999. 49.
- ¹⁶ 황경오. 2000. 43.
- ¹⁷ 김경일. 1998. 31.
- ¹⁸ 리창승. 2000. 12.
- ¹⁹ 김명철. 2000. 14.
- ²⁰ 김성금. 1999. 14.
- ²¹ 리명호. 1998. 50-51.
- ²² 리영화. 1999. 11.
- ²³ 김순재. 2000. 21.
- ²⁴ 김봉호. 2005. 58.
- ²⁵ 강성길. 2002. 19.
- ²⁶ 김봉호. 2005. 58-59.
- ²⁷ 리기성. 2003. 8.; 김형석. 2004. 역시 동일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²⁸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김정일은 2002년 9월 5일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라”는 지침을 제시하였고 이후 이론적 정립과정을 거쳐 2003년 8월 28일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고 한다. 한기범. 2009. 149-150.; 권영경. 2008. 역시 선군시대 경제전략은 2002년 9월 이후 이론화 작업에 착수되었다고 분석한다.



- ²⁹ “선군시대에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이며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김봉호. 2005. 109.
- ³⁰ 리기성. 2003. 5.
- ³¹ 박명혁. 2003. 9.
- ³² 김재서. 2004. 13-14.
- ³³ 조용주. 2005. 8-9.
- ³⁴ 김원국. 2005. 9.
- ³⁵ 김봉호. 2005. 109.
- ³⁶ 심은심. 2005. 12.
- ³⁷ 김형석. 2004. 2.
- ³⁸ 박명혁. 2003. 7.
- ³⁹ 박명혁. 2003. 7-8.
- ⁴⁰ 리기성. 2003. 6.
- ⁴¹ 김덕호. 2004. 6.
- ⁴² 김원국. 2005. 9.
- ⁴³ 박홍규. 2004. 6.
- ⁴⁴ 박명혁. 2003. 8.
- ⁴⁵ 조옥술. 2003. 5.
- ⁴⁶ 조옥술. 2003. 5-6.
- ⁴⁷ 박명혁. 2003. 9.
- ⁴⁸ 김봉호. 2005. 111-112.
- ⁴⁹ 리기성. 2003. 7.
- ⁵⁰ 강철민. 2004. 2.
- ⁵¹ 예를 들어 손영석. 2005.
- ⁵² 김봉호. 2005. 47.
- ⁵³ 강성길. 2002. 25.
- ⁵⁴ 장덕성. 2007. 6.
- ⁵⁵ 예컨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맞서 조국과 사회주의를 지키려면 국방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박홍규. 2004. 15.
- ⁵⁶ 물론 북한 특유의 속도전이나 2009년에 전개된 150일 전투 및 100일 전투와 같은 노력동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경쟁이나 동원은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 ⁵⁷ 양호남. 2002. 19.
- ⁵⁸ 한기범. 2009. 155.
- ⁵⁹ 임수호. 2009a. 26-27.



⁶⁰ “정세가 긴장하면 군사를 강화하다가도 정세가 완화되면 군사를 약화시키며 사회경제적과업이 전면에서 나서는 국방을 쥘버리는 일이 사회주의정치에서는 허용될수 없다. ... 한때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국방에 힘을 넣으면 경제가 주저앉고 사회발전이 떠진다고 하면서 나라의 국방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이것은 군대를 단순히 물질적부의 소비자로만 보는 그릇된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군대가 강해야 경제건설의 평화적조건이 보장되게된다. ... 모든 당, 국가경제기관들에서는 군사사업과 관련한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 강력한 국방력을 담보해주는 우리 식 경제구조를 적극 살려야 한다.”

⁶¹ 리창혁. 2001. 2-3.

⁶² 안윤옥. 2001. 9-10.

⁶³ 리기반. 2001. 13-14.

⁶⁴ 이는 7·1 조치 및 이후의 개혁적 정책이 3년여의 실험 이후 2005년 무렵부터 후퇴하고 책임을 맡았던 박봉주 총리의 전격적인 퇴진에서도 확인된다.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한기범. 2009. 174-215. 참조.

⁶⁵ 한기범. 2009. 135.

⁶⁶ 실제로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은 2007년 북한 경제성장률을 1.6%로 추정하고 있다.

<http://unstats.un.org/unsd/snaama/resultsCountry.asp?Country=408&SLevel=99&Selection=99&Selection=country&x=32&y=12>.

⁶⁷ 박영자. 2008. 7-8.

⁶⁸ 김보근. 2008.

⁶⁹ 임수호. 2009b.

⁷⁰ 김경일. 2005. 3.

⁷¹ 류운출. 2006. 12.

⁷² 류운출. 2007. 8.

⁷³ 황철. 2006. 14.

⁷⁴ 백철남. 2006. 16-17.

⁷⁵ 조길현. 2007. 11.

⁷⁶ 류창수. 2006. 8.

⁷⁷ 오주철. 2008. 11-14.

⁷⁸ 리동구. 2008. 19.

⁷⁹ 럽병호. 2005. 15.

⁸⁰ 박형중. 2009. 286-288.



⁸¹ 현재로서는 김정일 이후 3남 혹은 제3자로의 권력 이양이 이루어져 ‘후계자’ 체제가 될 것인지 혹은 여러 명이 권력을 분담하는 ‘후계체제’가 될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 모두를 총칭하여 후계자로 표현하기로 한다.

⁸² 김병연. 2010. 11.

⁸³ Gross, Daniel and Alfred Steinherr. 1995. 102.

참고문헌

- 강 성. 2002. 《4대제일주의》. 평양: 평양출판사.
- 강성길. 2002. 《선군시대의 조국을 가다》. 평양: 평양출판사.
- 강철민. 20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2호.
- 권영경. 2008. “7·1 조치 이후 북한정권의 경제개혁·개방전략과 향후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1호.
- 김경일. 1998. “추가적인 노동보수제는 기업소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공간.” <경제연구> 2호.
- 김경일. 2005.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생명선.” <경제연구> 1호.
- 김동남. 200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결정적담보.” <경제연구> 2호.
- 김동식. 1999.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우리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경제연구> 3호.
- 김덕호. 2004.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앞세워 나가는것은 선군시대경제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호.
- 김명철. 2000. “전반적생산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집단주의적원칙에 맞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2호.
- 김병연. 2010.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시나리오, 전략 및 정책.” <제20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2월.
- 김보근. 2008. “북한 상인계층과 자본의 형성.”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북한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회의>. 12월 4일.
- 김봉호. 2005.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 평양: 평양출판사.
- 김성금. 1999. “군경제의 종합적발전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4호.



- 김순재. 2000. “지방경제의 발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 <경제연구> 1호.
- 김원국. 2005.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의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3호.
- 김원삼 · 최순옥. 2004. 《4대제일주의는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 영. 2004. 《선군정치와 조국통일》. 평양: 평양출판사.
- 김재서. 1999. “경제건설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2호.
- 김재서. 2004. “선군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경제관리.” <경제연구> 1호.
- 김형석. 200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독창성.” <경제연구> 4호.
- 럼병호. 2005.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개진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4호.
- 류운출. 2006. “당의 령도와 국가적지도는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 <경제연구> 1호.
- 류운출. 2007. “경제건설에서 군사선행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4호.
- 류창수. 2006.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제1차적인 전략적과업.” <경제연구> 3호.
- 리기반. 2001.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4호.
- 리기성. 199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현시기 경제운영방향과 자립적민족경제 잠재력의 옳은 리용.” <경제연구> 4호.
- 리기성. 199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경제를 변함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보투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호.
- 리기성. 200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 <경제연구> 2호.
- 리동구. 2008.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관철의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호.
- 리명숙. 1996. “국제경제협작의 본질적특징.” <경제연구> 4호.
- 리명호. 1998. “경제관리와 경제제도의 련관을 부인하는 기회주의적견해의 반동성.” <경제연구> 1호.
- 리민철. 199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자립적경제건설의 력사적공적과 그 영원한 생명력.” <경제연구> 2호.
- 리성혁. 2001.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 <경제연구> 1호.
- 리성희. 1997. “합작기업의 본질적특징과 그 역할.” <경제연구> 2호.
- 리영화. 1999.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근본담보.” <경제연구> 3호.
- 리정용. 1998.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적극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



- 제연구) 2호.
- 리준혁. 1996. “혁명적경제전략의 관철과 사회주의경제적진지의 공고화.” <경제연구> 3호.
- 리창승. 2000. “경제적손실을 없애는것은 현시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2호.
- 리창혁. 2001. “우리 당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고수와 경제강국건설의 성과적추진.” <경제연구> 4호.
- 민족통일연구원. 1992.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 박두성. 1996. “사회적생산의 정상화와 인민경제선행부문의 발전.” <경제연구> 4호.
- 박명달. 1997. “농촌로력진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담보.” <경제연구> 1호.
- 박명혁. 2003.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경제연구> 3호.
- 박영자. 2008. “2000년대 북한 노동자의 노동이상.”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북한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회의>. 12월 4일.
- 박재영. 199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연계에 관한 주체의 경제리론의 독창성.” <경제연구> 1호.
- 박현철. 1997. “현대자본주의적중소기업의 교활한 해외침투수법.” <경제연구> 1호.
- 박형중. 2009.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통일과정.” 《북한, 어디로 가는가?》. 김연철 편. 서울: 플래닛미디어.
- 박흥규. 2004.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 <경제연구> 1호.
- 백철남. 2006. “선군시대 경제구조의 특징.” <경제연구> 3호.
- 손영석. 200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할 것이다.” <경제연구> 2호.
- 심은심. 2004. “선군시대 재생산의 몇가지 리론문제.” <경제연구> 2호.
- 안윤옥. 2001. “자립적민족경제의 강화는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4호.
- 양문수. 2009.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 12권 2호.
- 양호남. 2002. “경제강국건설에서 기술개건의 절박성.” <경제연구> 1호.
- 오경섭. 2009.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 <시대정신> 가을호.
- 오주철. 2008.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본성적요구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높은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하는 로선.” <경제연구> 2호.
- 유광진 외. 2006. “북한 정치 변화: 김정일체제의 구축을 중심으로.”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고유환 편. 서울: 선인.
- 임수호. 2009a.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평가: ‘선군(先軍)경제노선’을 중심으로.” <수는 북한경제> 여름호.
- 임수호. 2009b. “북한 체제단속과 시장통제 강화 정책.” <평화재단 제30차 전문가포럼>. 4월 14일.



- 장덕성. 2007.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전반적경제발전을 위한 기본담보.” <경제연구> 4호.
- 장명호. 1999. “농업생산은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 <경제연구> 1호.
- 전덕성. 2004.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 정성장. 2009.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와 권력엘리트.”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현대 북한연구회 편. 서울: 한울.
- 조길현. 2007. “경제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는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관철의 중요담보.” <경제연구> 4호.
- 조동호. 2009. “최근 북한의 경제동향.” <시대정신> 가을호.
- 조동호 외. 2002.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조옥술. 2003.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추동력.” <경제연구> 3호.
- 조옹주. 2005.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1호.
- 진희관. 2009. “북한의 변화와 정치적 통일과정.” 《북한, 어디로 가는가?》. 김연철 편. 서울: 플래닛미디어.
- 최영옥. 1997.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2호.
- 최영철. 1998. “라진-선봉지구를 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로 꾸리는것은 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의 중요고리.” <경제연구> 1호.
- 통일부. 2009. <월간 북한동향> 8월호.
- 한기범. 2009.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2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한국은행. 2002. <2001년 북한 GDP 추정 결과> 공보 2002-5-19호.
- 황경오. 2000. “다국적기업체의 략탈적, 침략적정체.” <경제연구> 2호.
- 황 철. 2006. “국방공업위주의 경제토대는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담보.” <경제연구> 1호.
- 황철진. 1999. “다국적기업과 직접투자.” <경제연구> 3호.

Gross, Daniel and Alfred Steinherr. 1995. *Winds of Change: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ondon: Longman.



필자약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 협동과정 교수로 재직중인 조동호 교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기회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중앙일보 '중앙시평' 컬럼리스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제주평화연구원, 2010), “북한경제 중국예속론의 비판적 고찰”(『국제지역연구』, 2008),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입 조건 및 혜택, 그리고 북한의 선택”(『통일문제연구』, 2008), “절망의 10년, 기교의 10년: 남북경협 20년의 평가”(『담론201』, 2008)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 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최은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30) ehchoi@eai.or.kr

